아동은 국가의 미래, 세심한 배려가 필요

최 경 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아동급식의 질적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여러가지를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되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급식업자 등 우리 모두가 반성하는 바가 컸다.

우리나라는 그간 IMF 외환위기속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틀을 강화하여 왔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폭과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많은 사각지대가 있어 왔다.

이러한 사각지대 가운데 하나가 아동에 대한 급식문제였다.

그 동안 아동에 대한 급식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학교 내에서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초·중·고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제도(교육부 소관)와 또 하나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여 실제 밥을 거르는 아동에게 조·석식을 제공하는 제도(보건복지부 소관)였다.

그러나 이 양제도 사이에서 급식대상의 차이로 학교중식 지원대상(약 30만명)이 방학 기간에는 중식을 사실상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모든 자녀에게는 원칙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도 중식을 지원토록 하여 작년 겨울방학부터 지원키로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방학 중 약 5만명 정도의 중식지원 대상자가 약 25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하여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 그 급식지원 방법은 아동이 실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주변식당 활용, 주·부식 지원,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일선 시·군·구(사회복지사 중심)에서 정하여 추진토록 하여 왔다.

> 아동급식은
> 단순히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 자라나는 아동들에게우리사회가 아직은 남을 배려하는
> 따뜻한마음이남아 있다는 것을
> 일깨우는기회가되었다고본다.

금번 군산·제주의 사건은 도시락의 품질이 낮다는 데서 사회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 내에서는 급식전달 대상의 일시 대폭적 확대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동과 학부모 등에게 아픈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에서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서비스의 질(소위 ‘정책품질’)을 어떻게 제고 하느냐를 생각하게 하였다.

금번 파장으로 정부는 여러가지 대안을 만든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였지만, 아동급식의 충분조건으로 정부 이외에도 지역사회, 시민단체, 학부모 등 모두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아동급식은 단순히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우리사회가 아직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큰 성장동력이 될 아동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기초적 복지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미래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